

정책제언 I

道 대학 졸업생 유출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해야

도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일반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는 8,154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유입형’은 63.6%에 해당하는 5,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강원자치도 내 지역 대학을 졸업해 해당 권역에서 취업하는 ‘지역잔류형’의 경우 24.1%(1,967명)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58.4%), 제주권(56.3%), 호남권(53%)의 ‘지역잔류형’ 비중이 50%를 웃돈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역의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니 지역은 인재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지역 대졸자들의 수도권 유출에는 ‘경제적 보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도내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들의 초임 임금을 살펴보면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257만 6,528원, 강원권은 244만 5,709원을 받았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수도권 취업자들의 초임 급여가 13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차이는 근무 연수에 따라 갈수록 벌어진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청년층 유출 원인을 파악해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나는 현실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내 대학 출신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해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데다 복지는 취약한 편이다. 직접적인 임금 인상이 힘들면 세제 혜택 등 간접효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의 지역 이탈로 연결된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유출, 출산을 저하, 지역 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한류 관광 치밀한 법적 검토 필요

한류 관광 일변지인 춘천 남이섬을 비롯해 강원 도내에는 K-드라마와 K-팝 명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 등 한류 명소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집니다. 특히 BTS 앨범 재킷과 화보 촬영지는 전 세계 팬들의 방문지로 손꼽힙니다. K-컬처에 힘입어 이들 지역은 관광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 한류 상징물 활용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류 관광지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삼척시의 방탄소년단(BTS) 관련 조형물 철거는 사전 법적 검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는 BTS 앨범 재킷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맹방해변 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BTS 소속사 측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특히 ‘Butter’ 앨범 재킷 촬영에 사용된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 발리볼 대 등 비주얼적 요소는 모두 당사의 성과라며, BTS 그룹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앨범 콘셉트 포토 이미지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과 사용 협의가 불발된 삼척시는 결국 맹방해변 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관광 책자, 안내판 등에 게재된 BTS 촬영지 등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BTS 연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소속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맹방해변에서 BTS 관련 조형물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류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삼척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곳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지자체들은 K-컬처 활용 이전에 변호사에 심층적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때론 기존의 촬영 장소나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팬과 관광객들은 새로 만든 조형물이나 시설보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류 명소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I

첨단기술 1위 중국 53개 한국은 0, 암울해진 미래 성장

인공지능(AI)과 유전공학, 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 핵심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글로벌 핵심경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64개 첨단 기술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53개, 미국은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 한 분야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고급 집적회로 반도체 설계·제조’ 등 38개 부문에선 5위 안에도 못 들었다. 배터리 분야도 3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에선 1위지만 미래 시스템반도체 설계에선 존재감이 없고, 배터리도 미래 기술 기준에서 보면 중국에 밀린다는 얘기가.

한국과 미국의 AI 기술 격차가 447년이란 미 업체의 분석도 나왔다. AI 투자를 지난해 수준으로 가정할 때 미국이 2040년 도달하게 될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산정했다. 한국이 지난 5년 AI에 투자한 예산이 미국의 3%에도 못 미치고, AI 기술 특성상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점이 근거다.

호주 보고서의 분석은 논문 220만 편의 인용 횟수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란 점에서 한계가 있고, 미 업체도 자국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장기간에 걸친 국가 주도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 기술 인력전송 등을 통해 미래 첨단 핵심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까지 부정할 순 없다.

AI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 이어 16일 스위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가장 뜨거운 화두다. 이런 첨단 기술력이 국가의 미래 운명까지 좌우할 것이란 건 이제 상식이다.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의 앞날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은 인텔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준 건 우려가 현실화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현대차도 총칭공장까지 팔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거꾸로 가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오피니언

정부동향

통계청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 더 쉽고, 편리하고, 똑똑하게 이사지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
- 통계청이 이사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합니다. -

-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국민이 이사를 고려할 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살고싶은 우리동네』를 1월 19일부터 새롭게 개편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 「살고싶은 우리동네」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때 여러 지표를 활용해 이사지역을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 서비스 개편으로 지표는 추가·세분화하여 자연, 안전, 교육, 생활편의·교통, 복지·문화 등 7개 분야에 51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다. 개인별 주거지 선호도 및 중요도(가중치)에 따라 관심 지표를 설정하면 **이사하기 적합한 지역 10곳을 추천해 준다.**
 - 생활유형(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여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 분석’ 방식과 이용자가 직접 지표를 추가·삭제 하거나 중요도(가중치)를 바꾸어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분석’ 방식이 있다.
 - 생활유형(라이프스타일)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8종*으로 구성하였다.
 - * 생활유형(라이프스타일) : ①MZ세대, ②자기계발형, ③1인 가구, ④신혼부부, ⑤초등 학부모, ⑥중고생 학부모, ⑦반려동물 가구, ⑧ 은퇴 세대
 -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 보내는 가구 등이 증가하여 ‘반려동물가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 SGIS 살고싶은 우리동네 주요화면 ●



간편 분석은 8가지 생활유형 (라이프스타일)으로 제공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1~10위 지역」 추천 및 위치정보 제공

-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환경부

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엄정 관리를 위한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실시(2024.1월~)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특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현장을 살폈으며, 12월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등 지원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포일(2024년 6월경)로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 현재 연면적 500㎡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기지정·관리 중(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제5목)

이에 따라,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 4,200여 곳은 2025년 6월경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 둘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고, 덧씌움지붕, 소규모 슬레이트 사용, 산지 위치 등으로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건축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직접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직접 조사와 지자체별 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고,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거주주민뿐만 아니라 및 인근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조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 의료가 취약한 300여 개 농촌 마을, 6만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 전체 17.7%(‘22년 통계청)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9.3(‘22년 통계청)

* 의료기관 수: 군지역 6,097개(8.0%), 시지역 33,276(43.5), 구지역 37,045(48.5)(23.1분기)

○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 * (농업인 행복버스) 110회, 4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300회 내외, 6만 여 명
-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 농촌 왕진버스 사업신청 (1.22. 주간) → 사업대상자 선정(2.26. 주간) → 사업시행 (3월 이후)
-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 국민 생활과 더 가까워집니다

- 식품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식품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예산 105억원 편성 -
- 카페인 강조 등 안전정보 표시 강조, 영양성분 표시 확대(일부→모든 가공식품) -
- 표시 정보부터 회수 등 안전 정보까지 푸드 큐알(QR)로 실시간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는 큐알*(QR)에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 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 예산 10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 푸드 QR: 식품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와 식품 표시, 안전 등 해당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담은 QR코드
- 최근 식품 표시 정보의 지속적 증가로 글자 크기가 작아져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식품 정보를 큐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 소비자 인식조사('22, 국민 소통단): 식품표시 불편 81%, 글자 크기 확대 필요 46.3% / 국민소통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 실무진(사무총장급) 중심으로 단체 회원 1,000명 구성
 - ** 2024년~2026년(3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273억원의 예산 편성
- 1. 안전 정보 표시를 강조하고, 영양성분 표시를 확대한다

 -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큐알(QR)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 * 'e-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정보제공'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22.9.~현재) 결과 반영
 - 청소년,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 *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음
 -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일부 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 영양학적 가치가 낮아 정보제공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품목(추잉껌 등)은 제외
 - 또한 소비자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식품표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1월부터 구성·운영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식품표시 제도의 개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참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한 ‘무(free)’ 강조표시는 금지되어 있었으나, 알레르기 환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서는 ‘무(free)’ 강조표시를 허용**했다.

*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계,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22종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시행('23.12.28.)

□ 2. 소비자 관심 생활정보를 큐알(QR)에 담아 실시간 제공한다

○ 식품에 표시된 큐알(QR)을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는 것만으로 표시 정보부터 회수 여부 등 안전 정보까지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일상생활 체감형 식품 정보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24년 11월에 최초 가동하며, 식품업체가 포장지에 푸드 큐알을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식품표시 ▲회수 등 안전정보 ▲원재료, 영양성분 등 건강정보 ▲조리법 등 생활정보 등


** 정보시스템 구축 : ('24)국내 제조식품용→('25)수입식품용→('26)농·축·수산물용

○ 또한, 푸드 큐알(QR) 정보를 점자(인쇄용 파일), 아바타 수어영상,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각·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프 |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김태영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장기교육 프로그램 설계 배경

-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관한 것임
 - 지방행정을 지방자치로 오해한 결과 그 동안 과도하게 집행부 중심 자치를 실시해 온 것도 상당 부분 사실임
 - 주민과 지방의회는 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이며, 최근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이와 같은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일정 부분 조정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4조는 기관구성의 다양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염두에 둔 것임
 - 자치선진국에서처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일부 지역에서라도 채택된다면 더 이상 집행부 중심이 아닌 지방의회 중심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임
 -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제6, 7조, 제30조의 2, 제32, 39조 등)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3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뒷받침됨
 -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별도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됨
-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성 등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예견되며, 그 결과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임
 - 집행부 소속 공직자와 의결기관 소속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일정 부분 달라야 할 부분도 있음
 -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국회의정센터의 중기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임)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에 속한 공직자들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염두에 두고 각종 교육기관은 그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함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방향

- 우선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전술된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은 없음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교과서적 구분이 아니라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지만 하나의 기구(법인)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와 철학에 기초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이 집행부 소속 공직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위치함. 따라서 헌법 가치에 대한 학습이 특별히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리더십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더욱 중요함
 - 교육 대상은 원칙적으로 4급~5급에 해당되지만 전체 공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별표 4]

-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방향은 리더십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임
 -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기본 실무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할당되는 시간의 비중은 리더십 교육, 실무교육이 대략 3:7 정도 배정되는 것이 적절함
 - 7할에 해당되는 실무 교육에는 조례,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심사, 지방인사제도, 여론 수렴, 의정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따라서 리더십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수도 있음
 - 실무과정에는 정부회계, 전산 교육 등도 포함되며, 특히 회의 진행, 상임위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교육도 포함되며, 전반적인 대략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그림 1]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앙·지방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추진 역량 강화

- 지방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 간부 공무원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 광역의회의 경우 교육청 등과의 상생,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요

② 지방시대 뉴거버넌스의 정책 창도자 양성

-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의정 환경이 변화된바, 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과의 협업의 정신이 필요하며 뉴거버넌스 시대 의회 간부들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창도를 통한 역할을 강화가 필요

③ 지방의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역량 제고

- 지방의회의 핵심 관료로서 실무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한 의회 운영의 기술 확립 및 소속 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적시에 완성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④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리더십

-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간의 협력과 소통 능력을 제고하여 협력적 관계 유지·발전의 선구가 되고 의회 간, 국제적으로 외국의 지방의회 등과 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협력역량의 강화가 필요

대안 및 제언: 교육프로그램 세부 내용 제언

- 첫째, 헌법 일반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단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에 관한 교육이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헌법정신과 관련된 심도 있는 철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각종 사례들이 활용되며,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과 실습 등이 수반될 것임. 예컨대, 효율성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접한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임
 - 한편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특정 사례 관련 공직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임
 - 기타 윤리성, 합리성 등 다양한 보편가치들을 기준으로 실제 상황에 직면한 공직자들이 취해야할 태도나 입장 등과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풍부한 사례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5~6주 배정)
- 둘째,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조례 실무에 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헌법가치에 대한 이해는 공직가치와 함께 기본 소양에 해당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는 기본 직무역량에 해당되므로 심도 있는 자치법규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
 -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시하여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임(2~3주 배정)
- 셋째, 리더십과 정책결정에 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함
 - 리더십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며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가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리더십을 이해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함
 -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정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융합하여 리더십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량임
 -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
 -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는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며 협의의 정책평가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실적평가와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함
 - 평가를 통하여 환류가 발생하게 되고, 공직자들은 환류 기법을 익히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정책평가는 집행부가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 예산과 결산에 대한 평가도 정책평가에 해당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함
 - 행정사무감사 역시 광의의 정책평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집행부가 단순히 기관 운영에만 관심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기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것임(11 시 2주 배정)
- 넷째, 지방의회 운영 일반에 관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임
 - 통상적인 관료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집행부의 운영 원칙과 상당 부분 다른 조직운영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 회의 소집과 운영, 상임위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여론 수렴 절차와 기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 정책지원관의 활용과 관련된 학습도 별도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이들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학습도 필요함
 -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함
 -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최고 멘토 집단이며 전문위원의 활용 수준 정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의정활동 관련 정밀한 활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임(4~5주 배정)
- 다섯째, 조례, 예·결산 실무 등에 관한 학습임
 - 조례의 제정, 개정 등과 관련된 실무교육은 필수불가결하며 예산, 결산 관련 추가 학습의 기회도 가져야 할 것임
 - 특히 정부회계론, 지방재정론 등에 대한 학습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임

- 조례, 예산, 결산 등에 대한 학습은 본 과정의 핵심이며, 시간 배정도 최소한 각각 4~5주 정도이어야 하고 모든 과정은 토론과 실무 연습을 병행하여 진행될 것임(8시 0주 배정)
- 여섯째,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됨
 - 다만,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의결기관의 조직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추후 의회직렬에 대한 논의의 공간과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제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 내용은 2~3주 정도 배정될 것임(2~3주 배정)
- 일곱째, 여론수렴 방식과 절차, 그리고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
 - 기초 통계 과목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기 요약 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음
 -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론 학습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대외적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경우 특별히 여론, 미디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 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시민을 대리하여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고 반영하여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임(3~4주 배정)
- 여덟째,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본 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의 형식을 취하지만 온라인 방식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집합교육의 경우 매주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되고, 개별과제 및 분임과제를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증시킬 것임
 - 온라인 교육의 경우, 15~20분 단위 기본강의를 위주로 진행하되,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요약, 질의응답, 자료공유, 분임토의 등의 세부 모듈에 따라 정밀하게 운영될 것임
 - 대략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교육 분야	시간(비율)	주요 교과 내용	비고
핵심역량 670H (46.2%)	의정지원 혁신	129시간(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협력 정신 •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의정환경 변화·이해 • 의정활동 지원관리, 의회조직·인사관리, 대시민, 언론,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 의회 기본직무관리, 의회 운영관리 • 집행기관 등과의 협력, 의회의 책임과 의무 	의회 분반 301h (20.7%)
	과제연구	172시간(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분임 연구 2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방안 2. 지역균형발전 및 초광역연합 구축방안 • 개인 연구 2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의회 현안과제(또는 인사권 독립이후 의회사무기구 운영 개선방안) 2.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 	
	리더십 및 갈등관리	000시간(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 역량, 자기변화훈련, 갈등관리 역량 	
기본역량 734H (50.7%)	기반가치	000시간(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윤리, 헌법가치 등 공직가치, 미래·지방시대 분야 국정과제 	장기 과정 공통
	직무가치	000시간(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직무, 직무소양 등 	
	자기개발가치	000시간(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소양교과, 글로벌역량 	
기타	000시간(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수료식, 과정안내, 자치회 활동 등 		


미래 자치와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

- 미셸 푸코에 의하면 "자치(self-governing)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수의 개인이 접점을 이루는 지점에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공동체 자치가 시작된다"고 함
 - 공동체 자치를 흔히 주민자치라고 하며 이를 지방자치라고 부르며 집행부가 주도하는 자치는 지방행정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지방의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와 주민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루어지는 자치가 가까운 장래에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의회에 속한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바로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의결기구에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각종 직무에 필요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일 것임
 - 집행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대부분 중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은 별도의 역량이 요구됨
 - 이 글은 별도의 역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기초하여 대략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모든 과정과 개별과목들은 이론 강의와 병행하여 토의, 실무 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별도의 특화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성숙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임
 - *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과정 프로그램 설계 내용 일부를 소개한 글임(세부 교과과정은 본 지면에는 생략됨)

분야	세부 분야	시간	구분	주요 교과 내용
소계				301h(43주, 43일)
의정지원 혁신역량	의정지원 역량강화	129h	강의	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나) 지방의회 운영
				다)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
				라) 조례입법 활동
				마) 예·결산 활동
				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이해와 관리
				아) 의회 청원 및 민원의 관리와 처리
				자) 의회의 지방정책개발 및 제도화
				차) 의회의 홍보 및 언론대응
				카) 지방의회 위상강화 전략
				타) 주민자치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
				파) 기관구성다양화 방안과 지방의회
				하)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정책
				거) 지방의회와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과 소통
데)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러) 인구절벽의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과제				
머) 균형발전·초광역연합과 지방의회의 문제				
버)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지원 내재역량	분임연구	86h	참여	서) 지방의회 역량 제고 및 현안 해결방안 연구
				어) 중앙정부·집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강화
	개인연구	86h	자체 연구	저)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방안
				차) 소속 지방의회에서 부여한 과제의 연구
				케) 지방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정책브리프 II

댐 주변 지원정책으로 지역발전 가능하다 :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김 문 속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댐 주변 지원정책으로 지역발전 가능하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 일본은 시대에 따라 홍수 예방, 전력생산, 대도시로의 물 공급 목적 등으로 많은 댐을 건설하였다. 가장 큰 댐이라 해도 소양강댐의 1/5 수준이나, 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 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에 큰 변화의 초래를 인지하여 이미 소양강댐의 준공 시기인 1973년부터 댐 주변지역의 대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댐 주변지역 대책에 대한 정책들을 보면 일본은 선진국이 확실하다. 댐의 혜택을 보는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댐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과 주민 주도로 댐 건설단계에서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사례이다. 정부(국토교통성)에서는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다.이러한 댐 지원정책으로 몇몇 댐들은 댐이 지역의 귀중한 자원이 되면서 댐 건설 이전보다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 우리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은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일본과 같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개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인은 지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제도에서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형식만 갖추고 있다 보니, 단순 보상적인 사업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재원의 조성 과 배분, 사업비 집행,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제도의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치분권 시대에서 국내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내에 건설된 댐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피해만 볼 수 없다. 댐 주변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개선 노력은 물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댐 주변 지원정책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01 일본의 댐 정책

그동안 많은 댐을 건설

- 일본은 온대지역의 해양성 기후로 우리나라보다 50% 이상 많은 강수량을 보임
 - 강수량은 여름과 태풍 시기에 많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적 연중 내리는 특징
 - 이에 일본은 물의 이용보다는 홍수 예방과 수력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댐을 건설
- 현재 일본에는 약 3,000개의 댐이 있음
 - 1940년대에는 태풍에 의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댐 건설이 본격화
 - 1950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로 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물 공급과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중심으로 건설
 -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200개가 넘는 댐으로 완공
 - 현재 국토교통성 및 수자원기구 에서 관리하는 댐이 130개, 광역지자체 (국비가 지원된 댐)에서 관리하는 댐이 440개, 전력회사(9개) 1,551개, 이외에도 지자체, 민간 등에서 댐을 소유

- 댐의 저수용량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적은 6억^{m³}대 2개, 4억^{m³}대 1개, 3억^{m³}대 5개 등으로 일본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댐의 1/5 수준임
- 발전하는 댐만으로도 2,559개가 있으며, 연간 72,000GWh를 생산하여 총 전력생산의 7.5%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많은 수력발전을 하고 있음

일본은 1970년대부터 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대응

- 소양강댐이 준공된 시기인 1973년 10월에 이미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이하, 수특법)”을 제정하여 댐 주변지역 중심으로 활성화대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
 - 댐 건설에 따른 주민의 이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에 댐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진료소 등 생활기반을 정비토록 함
 - 수특법의 14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수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댐으로 인해 편익을 보는 지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임

댐 주변지역을 위한 다양한 정책

- 수원지역대책기금의 조성
 - 수특법에서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보완하고 보다 세심한 대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정부와 댐으로부터 수혜를 보는 지자체로부터 댐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을 조성
 - 1976년 (재)토네가와·아라카와 수원지역대책기금이 발족된 이후 1977년 (재)키소산센(木曾三川)수원지대책기금, 1979년 (재)요도가와(淀川)수원지대책기금, 1982년 (재)치쿠고가와(筑後川)수원지역대책기금 등 각지에서 설립
 -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재건 및 지역진흥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상·하류 지역의 상호이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활용
- “공익재단법인 미야가세댐 주변 진흥재단”
 - 댐 건설단계에서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한 대표적 사례
 - 현재 일본의 댐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댐이 건설되면서 오히려 지역이 활성화된 사례

• 미야가세 댐

- 2000년 준공
- 총 저수량 1.93억^{m³}(19위), 제방높이 156m(6위)
댐체적 200만^{m³}(1위)

• 재단(1992년 설립)

- 출자 : 현, 3개시정촌, 18개 민간단체 (10억 2천만엔)
- 재단 인원 : 10인(운영비는 가나가와현에서 지원)
- 사업비 : 하류지역 수혜자 부담금(지자체, 수도사업자)
- 일자리 : 100인 (14일/월)
3개의 거점 운영 및 주변관리(자체 수입금으로 운영)
- 방문객 : 연간 160만명
(체험, 레저, 휴양, 교육, 댐 견학, 계절별 이벤트행사 등)
- 재단의 특징 : 지자체 및 주민 주도에 의한 설립



• 정부(국토교통성) 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

- 수원지역 비전 사업 : 200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상·하류 교류, 댐 수면 이용의 촉진, 댐 시설 견학, 댐관리자·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친수공간 정비, 이벤트 행사 추진 등
- 수원지원 네트워크 사업(물의 고향 응원 프로젝트 사업) : 댐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여건이 취약하여 정부 차원에서 역할 수행.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 및 여행업계와 협력하여 홍보 책자 발간, 홈페이지 홍보 등
- 지역에 열린 댐 사업 : 국토교통성 소관의 댐에 대하여 댐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 이 사업은 댐 및 호소를 이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는 조건으로 댐의 개방, 수면의 활용(캠프장 등)을 허가해 주고 있음
- 댐 카드 : 2007년부터 통일된 디자인으로 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820여개의 댐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

• 국토 교통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홍보사업 •

		
<p>약 820개소에서 댐카드 발행</p>	<p>댐 정보 등 홍보책자</p>	<p>댐 투어 상품 소개</p>

-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 추진
- 댐의 수혜를 보는 지자체에서는 댐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기금을 조성

우리나라 댐 정책

■ 건설목적 및 주체에 따라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

- 환경부(K-water): 40개(다목적댐 21, 용수댐 14, 홍수조절 3, 기타 2)
 - 총 저수용량(35개 댐) 133억^m³, 강원도 23% 차지(다목적댐 2, 용수댐 2)
- 산자부(한국수력원자력): 15개(수력발전 8, 양수발전 7)
 - 총 저수용량(8개 댐) 18억^m³, 강원도 74% 차지(4개)
- 농림부(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3,356개(25억^m³), 지자체 14,174개(3억^m³)
 - 총 저수용량(17,530개 저수지) 28억^m³, 강원도 3.9%(317개) 차지

Ⅰ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1990년대부터 시작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시행
 - 발전용댐은 1989년에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시작
 - 다목적댐은 1990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었고,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 개정을 거쳐 1999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되면서 법적 체계 마련
 - 도내에는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댐은 7개소이며, 7개 시군이 해당

구분	대상댐	시군
발전소 주변지역 (한국수력원자력 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양양양수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K-water 댐)	소양강댐, 횡성댐, 평 화의댐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주) 도암댐은 발전 중단으로 지원금 없음. 광동댐 및 달방댐(용수댐)은 지원대상 댐에 해당하지 않음

- 제도에 의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역할에 미흡
 - 제도는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나, 주민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
 -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크게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주로 농기계구입, 농로포장,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일회성·소모성 사업이 반복
- 이러한 원인은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
 -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음
 - 단순히 지원대상 댐(2,000만^m 이상인 댐 등), 지원대상 범위(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등)로 규정
 - 댐별로 주변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댐이 상생하는 방안, 즉 인문·사회·경제적 측면의 환경영향에 따른 지원 혹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 피해 규모가 큰 대형댐에서 출연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거나 없는 댐 주변지역에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전국 27개 댐 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매년 약 600~700억원 범위
 - 소양강댐 출연금은 총 출연금의 약 20%를 차지하나, 지원금은 10% 수준
- 지원사업비의 분산 집행, 지역별로 나눠주기식의 지원사업 추진으로 장기적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 한계

〈 춘천시 사례 〉

-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연간 78억 원(2022년 기준), 지자체 집행 39억 원(50%)
- 이 중 춘천시 지원사업비 약 18억 원으로 5개 읍면 30개리(97개 행정리)에 나누어 집행
 - 북산면 8.5억 원, 동면 6억 원, 신북읍 2억 원, 동내면 1억 원, 사북면 0.5억 원
- 댐관리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차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운 구조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댐 지원제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음


구분	한국	일본
댐 주변지역 정의	수면으로부터 5km	댐으로 인한 영향지역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협의하여 지정
주변지역 대책사업	단순 지원사업	댐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기금의 재원	댐 운영자(발전 및 용수판매 수입금의 일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 법인 운영비 수혜(지자체)지역 : 대책사업비
댐 주변지역 대책 추진 방법	지자체 50%(지역별 분배 지원) 댐관리자 50%(직접지원 성격)	공익재단법인 설립하여 자체적 운영

주) 댐 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수립(2014, 국토교통부) 수정 인용

출처 : 김문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브리프 III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박 현 석 | 연구위원(거버넌스그룹장)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정치과정

-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필수요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
 -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의 여파로 2006년에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됨
 - 정부는 2020년에도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
- 지역의 필수요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 지지
 -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의대정원 확대 찬성
 -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2.7%가 의대 정원 확대 지지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 천명
- 이 보고서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입법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제시
 - 우리의 목적은 의대정원 증원을 지지 혹은 비판하거나, 의대 정원과 관련된 최적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하며 정책결정 과정 분석의 관점에서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살펴보고자 함
 -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둘러싼 정치환경은 결국 실패로 끝난 2020년의 의대 정원 증원 건보다는 타협을 통해 입법에 성공한 공정경제 3법 입법 사례와 유사

• [그림 1] 입법의 정치과정 •



갈등적인 정책의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적인 의제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1) 정책 의제를 제시, (2)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거나, 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통해 정책 의제 추진, (3) 원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여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국회의 입법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정책의제의 경우 원내 다수당 혹은 다수 정책 연합의 지지가 필요
 -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하는 단점정부의 경우 대통령이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여당의 지지를 통해 입법화
 - 여당이 소수당인 분점정부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대한 야당의 견제로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하여 정책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화
 - 단점정부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여당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입법화에 실패(<표 1> 참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2020년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증원과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확대되면서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결국 입법화에 실패
-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압력집단의 정치사회적 파급력과 응집력이 큰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2020년 의대정원 증원 실패: 코로나19의 확산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파업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대 교수들도 호응하는 등 응집력을 발휘하며 강력히 반발
 -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은 사안에 따라 보수와 진보 계열 언론의 입장이 나뉘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언론계 전반에서 강력하게 반대
- 2020년 의대정원 증원과 언론중재법의 경우 야당과 압력집단이 공조하여 정부의 의제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여론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입법 좌절됨
 -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 의사 단체와 공조하며 강력히 반대하였고, 언론중재법의 경우도 야당이 언론 단체의 선호를 대변하며 강력하게 반대
 - 공정경제3법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기업집단의 선호를 대변하던 보수 야당 내부가 분열되었고,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됨
- 장기간 지속되어 온 갈등적인 정책의제들의 입법 과정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간의 의석분포, 원내 다수파의 응집력, 이해관계자 집단의 파급력, 정당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공조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임

• [표 1] 입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례 비교연구 •

구분	2020년 의대정원 증원	공정경제3법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2023년 의대정원 증원
원내 의석분포	단점정부	단점정부	단점정부	분점정부
다수파 응집력	낮음	높음	낮음	중간(야당 지지) ⁷⁾
압력집단 파급력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압력집단 응집력	높음	중간	높음	중간
정당-압력집단 연계	○	×	○	×
입법성공	×	○	×	?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와 유사한가?

- 정책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국회 내의 정치상황, 압력집단의 응집력, 정당-압력집단 간의 연계 등 정치적 환경은 차이를 보임
- 원내 다수 지지여부
 - 2020년의 경우 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단점정부였으나 야당이 의사단체와 연계 하여 강력하게 반발

- 현재는 여당의 의석 점유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점정부이지만 다수를 점유하는 야당인 민주당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 찬성
- 단점정부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분점정부라는 정치상황은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입법화 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야당 정책의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통해 원내 다수의 지지 확보 가능
- 이익집단의 파급력 및 응집력
 - 2020년의 경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공조하여 강력히 반발하였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
 - 현재 의대정원 증원 논의의 경우 개업의들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으나, 비인기 분야의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과 대형병원 등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등 의사집단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정당과 압력집단의 연계
 - 2020년의 경우 보수계열의 야당이 의사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공조하여 강력히 반대
 - 현재 여당은 2020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여 의사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며 각론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여당과 이견을 보임
 - 2020년과 달리 현재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정책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음
- 정치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의 보다는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함(<표 1>)
 - 양당의 정책선호 수렴: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이 강력히 지지하는 가운데 보수 야당의 지도부도 지지하여 표결을 통해 본회의 통과
 - 압력집단의 응집력 약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전경련이 무력화되었고 대한상의회 경총도 공조하지 않는 등 공정경제 3법 도입에 대한 기업 단체의 반발의 응집력이 낮은 상황이었음
 - 정당-압력집단 연계 부재: 기업단체의 선호를 대변하던 보수야당 지도부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압력집단과 정당 간의 공조관계가 무너짐
 -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한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여야 타협을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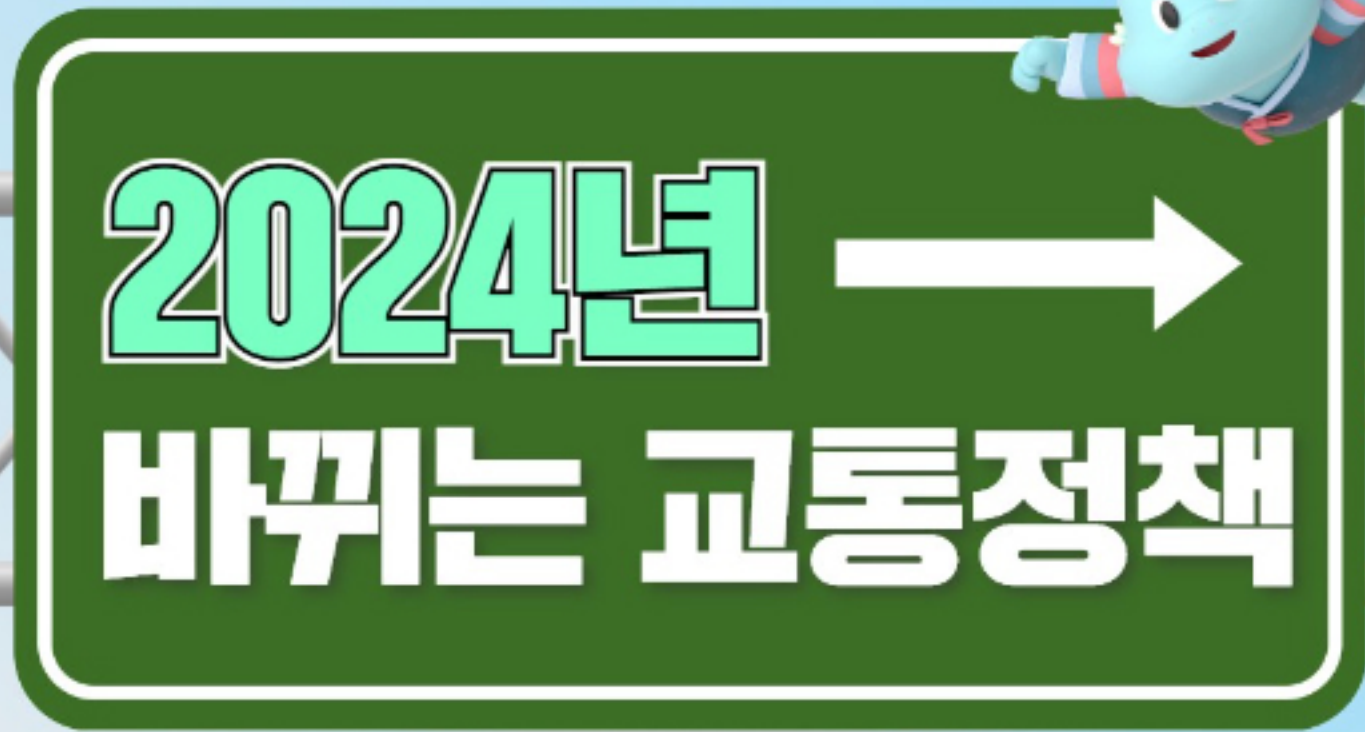
결론

-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되었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를 보임
-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공정경제 3법 입법과정과 유사
-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나, (1)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2)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3)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보수정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사단체와 정당 간의 연계 수준이 낮아졌고 여야의 입장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모아지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이자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알기쉬운 정책 I

2024년 바뀌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 2024 **민생정책**
돋보기 |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 12. 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 10. 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난해 대비
140% 증가(400만 명)한 갱신대상자 규모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하므로 해당하지 않음

안전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경찰청)

알기쉬운 정책 II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에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동 단위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러한 유사 모델을 운영하는 주요국 중에서,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이나 영국의 케어홈(Care Home), 일본의 개호보험시설에서는 간호사 또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간호지원인력의 경우 의사의 처방 하에 또는 처방 없이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촉탁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특징



요양시설 입소자



= 대부분 노인성 질환 환자




의료서비스·간호·간병 필요

해외 노인요양시설 운영 현황

미국, 영국, 일본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미국, 영국, 일본 노인요양시설

 미국 너싱홈



2024년 10월까지 주 7일
24시간 간호사를 배치




연구를 통해 최소 직원수와
상주 비용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입소 노인의 상태별 간호 제공
뇌졸중 회복, 파킨슨병 관리, 상처 관리,
급성 의료적 상태, 생애주기 돌봄, 일반적인 재활 등



 영국 이중등록 케어홈


케어홈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료요구도가 높아졌을 때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기존의 케어홈 시스템을 적용하여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간호사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방지

 일본 축탁의사 배치

대부분 개호요양시설에는 상근의사보다는 축탁의사를 배치

준간호사

도도부현 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가진 준간호사가 근무

간호사

의사의 지시에, 간호사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

개호복지사

의료인은 아니지만 1,800시간의
교육 후 경관 영양, 기도 흡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해외와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 운영 차이점

주요국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축탁의사의 사전 처방**임

영국, 미국

GP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1차의료
담당하는 일반의가 해당 역할을 담당

우리나라

입소한 노인요양시설과 계약된
축탁의가 방문하여 진찰을 한 후 처방하는 형태



축탁의 제도
한계점

- * 축탁의 활용에 따른 한계로 진료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에도 축탁의가 할 수 있는 처치가 협소함
- * 정액제로 운영되다보니, 축탁의의 진료가 형식화 되고있다는 지적도 존재함



국가별 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비교





국가별 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비교

서비스 제공 기관명	대상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
<p>일본</p> <p>개호노인보건시설</p>	요개호 판정자	경관영양, 객담 흡인, 암 통증치료	<p>의사 촉탁직</p> <p>간호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3명당 간호사 1명배치 -개호복지사가 교육이수 후 의료행위 수행 가능
<p>영국</p> <p>이중등록 케어홈</p>	요양보험제도 수급자	드레싱, 입통치료, 주사투약(근육, 정맥)	<p>의사 담당GP</p> <p>간호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의 건강수준과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시설 운영
<p>미국</p> <p>노성울</p>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대상자 또는 민간보험 가입자	주사투약(근육, 정맥, 정맥영양공급, 수술상처·욕창 관리, 재활치료, 의료모니터링, 약물관리, 통장관리, 전문의료장비 관리, 호흡기관리, 기관질개관리, 전문의료서비스	<p>의사 없음</p> <p>간호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1명이 주7일 8시간 연속근무 -교대간호사, 간호조무사 각 1명
<p>우리나라</p> <p>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p>	장기요양 1~4등급 수급자	영양관리, 배설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기타(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p>의사 촉탁직</p> <p>간호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6명당 간호인력 1명배치 <p>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중 간호사는 60% 배치</p>

지역단위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

-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해 시작
- 지역단위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전문요양실을 활용한 시범사업의 형태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간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을 실행

3/4



업무 재조정 논의

- *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업계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
- * 입소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한위임을 통한 업무 재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사료됨



업무 재조정 논의

- *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업계의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
- * 입소자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권한위임을 통한 업무 재조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사료됨

안정적인 네트워킹

- *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안정적인 네트워킹
- * 노인요양시설과 그 시설에서 계약한 축탁의와의 연속적인 관계 유지 강화
- *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적 유인책을 마련

의료진은 진료 외 수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개발

- * 시설 내에서 축탁의의 처방하에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
- * 간호사의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읽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원문 자료 | 김은정, 「주요국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비교 및 시사점」(「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4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1. 20.를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함

발간등록번호 | 31-9735042-001899-14 e-ISSN | 2799-3027 Copyright©NARS



제56호 | 발행일: 2023년 12월 26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박상철 | 02-6788-4524 | www.nars.go.kr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